너무 뻔뻔한 광주 시내버스노조

"혈세 손실 몰라"…파업기간 월급 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

"일은 안하고 돈만 챙기나"

시민들 거센 비난 잇따라

8일간의 버스파업이 남긴 것

- 운송수입 손실 6억4000만원
- 대체운행 인건비 2억2000만원
- 총 재정손실 10억1800만원

- 노조 "8억3000만원 더 지급하라"
- 광주시 "무노동무임금 양보 없다"

광주시내버스노조가 파업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파업으로 발생한 노조원 임금이 줄어든 부분을 보충해달라는 게 릴레이 1인 시위의 핵심 배경이다.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원칙에 위배되는데도, '시민의 발'을 멈추게 하는 파업을 하느라 수고했으니 사실상 '격려금'을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버스업체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파업 보상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챙겨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 광주지역버스노조(이하 버스노조)는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길에서 파업 기간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7일 첫 시위에 나선 뒤 10일부터 오도종 버스노조 위원장과 각 버스노조 지부장 등 10명이 번갈아가면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버스노조는 파업으로 월 평균 22일 만근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부족한 4일 치 급여를 연차수당으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조의 8일간의 파업으로 운송수입 손실 6억4000만 원을 포함한 대체운행 인건비 2억2000만 원 등 모두 10억1800만 원의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위 대상도 사측인 버스 회사가 아닌, 광주시 앞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주시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사측이 파업기간 시내버스 핸들을 잡지 않은 운전원들에 대해 무임금 원칙을 정한 만큼 광주시가 나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편인데도, 일 하지 않고 파업 한 '보상금'까지 시민 주머니를 털어 보전해달라는 '비상식적' 요구라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파업 손실에다 임금 보전까지 합쳐 공중에 뜬 수십억원을 다시 요금 인상과 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기 복귀한 운전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시민들도 파업 기간 불편을 입힌 것도 모자라 연차수당 등 대체비용으로 8억3200만 원의 혈세를 시민들에게 더 떠안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재확인

"정당한 사유 해당안돼"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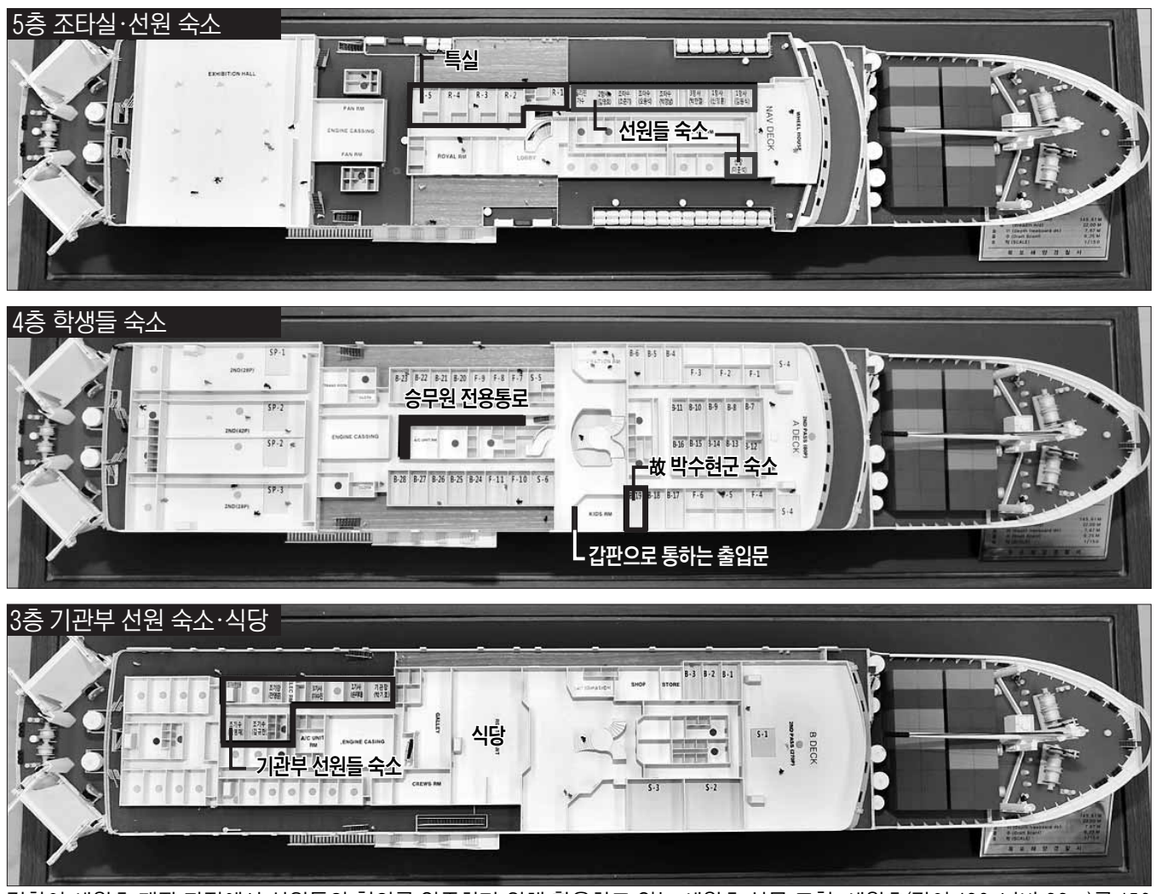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모형 효과…선원들 무책임한 행동 조목조목 지적

검찰, 2000만원 들여 제작

향후 재판에도 적극 활용



검찰이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세월호 실물 모형. 세월호(길이 136·너비 22m)를 150분의 1로 축소한 것이지만 각 층별 분리가 가능하고 선원별 숙소, 승객·교사가 머무르던 공간, 화물 적재 위치까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50분의 1로 축소된 세월호 실물 모형이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효과적' 도구로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세월호 참사 피해자·생존자 가족 등 일반인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도라는 말도 나온다. 구두변론과 서류검토 등으로 이뤄지는 재판에 견줘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고 시각적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세월호 실물 모형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문 미니어처 제작업체에 의뢰, 2000여만원을 들여 침몰한 세월호(길이 136·너비 22m)를 150분의 1로 축소, 제작한 것으로, 5층으로 이뤄진 배를 층별로 떼어내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모형을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세월호 선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우선, 4층 구조를 설명하다가 침몰 당시 단원고 고(故) 박수현 군이 머물던 4층 선실(B-19)과 몇 m 떨어져 있는 비상 갑판으로 나가는 출입구를 보여주며 "몇 m만 걸어나가면 비상 갑판으로 나가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대기하라'는 방송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했다.

박 군이 머물던 4층 선실과 몇 발자국 떨어진 좌·우 갑판은 각각 247명, 498명이 비상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도 모형을 통해 쉽게 설명했다. 검찰은 "4층에 위치한 승무원 전용 통로를 가리키며 이 통로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승객 객실과 연결돼 있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한 뒤 기관장 박모(53)씨가 사고 당시 5층에서 3층 기관실 가면서 이 문을 그대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출입문만 열고 승객에게 퇴선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박씨 등의 "이동이 불가능해 승객을 구조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시키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장, 검찰의 설명을 듣던 피해자·실종자 가족들은 눈가가 붉어졌고 울음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층간 이동 및 선원 구조 활동이 가능했다는 게 명백해진 것"이라는 검찰측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피고인에 대한 항의·욕설이 잇따랐다.

검찰은 이 실물 모형을 향후 재판에도 적극 활용,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우선 입양 안지키면 업무정지

입양기관 지도·감독 강화

보건부 오늘부터 입법예고

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입양기관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 원가정 보호 노력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입양특례법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위반했을 때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의 미준수 등을 비롯한 여러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에만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예비양부모 조사를 할 때 불시 방문 1회를 포함해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한다는 규정은, 불시 방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병언 아들과 술마시고 있으니 잡아가라" 허위 신고한 50대

쌍나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과 함께 술마시고 있다. 어서 와서 잡아가라"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즉결 심판에 회부.

○…9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해남군 북평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55)씨가 검찰 수배를 받고 1억원의 포상금이 내걸린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와 함께 술마시고 있으니 신속히 검거하라고 거짓 신고해 형사 20여명을 출동시키는 등 이날 하루 동안 모두 5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

○…경찰은 "올 들어서만 총 40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김씨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겼다"면서 "허위·장난 신고자는 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 /해남=박희석기자 dia@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3052	1	광산구 월곡동 681-1 영천마을주공아파트 910동 14층 1402호 75.99㎡	아파트	164,000,000 164,000,000	
2014타경 3366	1	동구 지산동 산1-9 1동 7층 705호 63.5㎡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14타경 4697	1	북구 하서로393-9, 101동 1층 107호[동남아파트]59.7㎡[대항력있는임차인,임차인보증금전액배당못받을경우그잔액매수인인수]	아파트	80,000,000 80,000,000	
2014타경 5485	1	서구 치평로 107, 102동 14층 1403호 [대우금호아파트] 59.94㎡	아파트	149,000,000 149,000,000	관리비미납금606,580원[2014.3.20현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21855	1	북구 임동 75-10 126㎡	대	164,495,540 164,495,5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지적및건물개황도참조]포함
		북구 임유길16 1층79.76㎡ 2층71.81㎡ 제시외 창고 등 37.04㎡[물건번호1:인접지[임동45-9]일부와일단지로이용,지적경계불명,정확한지적경계확인위하여측량요]	소매점및주택		
2013타경 32503	1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311-1 420㎡	대	83,298,260 83,298,2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지적및건물개황도참조]포함매각
		담양군 고서면 광산길37-9 83.47㎡ 부속건물 창고 41.08㎡ 제시외 화장실 등 23.1㎡	단독주택		
2014타경 1988	1	북구 임동 187-10 133.2㎡	대	86,477,520 86,477,520	일괄매각
		북구 경양로 51-6 56.19㎡ 부속건물 욕실 및 창고 4.95㎡ 변소 1.65㎡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7815	1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621-5 827㎡[현황묵전및묘지]	전	4,135,000 4,13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수기소재
2013타경 30026	1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 4-12 1445㎡[2013타경20081참조.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60,025,000 60,025,000	2013타경20081[중복]
2014타경 1452	3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228 1312㎡[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	전	542,776,000 542,776,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영광군청토지사용승낙받아신축,지적및건물개황도참조]제외
		동소 229-1 9418㎡[조경수포함평가.보전관리지역으로개발행위제한될수있음[해당부서[종합민원과허가담당]확인요]]	임야		
2014타경 1827	1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484-1 1614㎡	임야	93,698,000 93,698,000	수목포함평가.현황휴경지
2014타경 3502	1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59 509.3㎡	대	118,157,600 118,157,600	현황나지
2014타경 5041	1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24 12188㎡[자연환경보전지역]	답	79,222,000 79,2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4타경 2233	1	서구 광천동 14-11 113㎡	대	780,300,460 780,300,460	일괄매각.목록1,2일단지로이용중
		동소 15-8 122㎡	대		
		서구 무진대로963번길 14 1층56.59㎡ 2~5층각163.28㎡ 6층121.91㎡ 지하실148.76㎡ 보일러실,단란주점	여관등		
2014타경 4864	1	남구 주월동 80-7 708㎡[공유자김경삼지분13분의1전부]	도로	9,857,260 9,857,26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7. 25.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8. 1.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